

세월호 특수단 설치 “사실관계 밝힐 것”

靑, 3월 개시 국민청원에 “세월호 진상규명, 정부 의지 흔들림 없어… 현재진행형 “아직 독립적 수사체계 말씀드릴 단계 아냐… 법안 45건 계류 법·제도 보완할 것”

청와대는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특별수사단(특수단) 설치와 전면 재조사를 추진하는 국민청원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날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박정철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 라이브를 통해 이 같이 답했다.

지난 3월 29일 대통령령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지난달 17일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해당 청원은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생존자 가족 등이 모인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올린 글이다.

최초 청원자는 “세월호 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

라면서 “참사의 성격과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진실규명의 의지가 확실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 없다”며 “세월호 진상규명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도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최초 청원자는 진상 규명 3대 과제로 ▲해경의 선원 표적구조 활동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 ▲박근혜 정부 참사 당일 기록 봉인 및 증거 조작·은폐 규명 등을 제시했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와 관련해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기

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기 특조위 활동기한은 2020년으로 한 차례 연장됐다.

또 특조위가 선내 CC(폐쇄회로)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도 전했다.

박 비서관은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특조위 판단에 따라 고발 혹은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의 뜻은 검찰에 독립적 수사체계를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날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 법안은 45건에 달한다. 주로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된 법안”이라며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향후 특조위 활동에 따라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개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9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뉴시스



민노총 예산관련 주장 입장 표명 간담회 27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이 민노총 예산관련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 간담회를 실시한 가운데 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방문해 송성환 도의장의 간담회를 듣고 있다.

“자유한국당, 공당이길 포기”

민주,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기밀 누출에 “모든 조치 취할 것” 황교안 안보의식도 문제제기… “黃 GP 발언 ‘헌법 부정행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 자유한국당에 외교·안보 의식이 부재하다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외교 기밀 누설 사건과 황교안 대표가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 지역 군부대 GP(감시초소)를 방문해 “군과 정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고 한 발언을 공격했다.

먼저 민주당은 연일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 강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신뢰를 무너뜨리고 어느 때보다 공고한 한미관계, 두 정상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다”며 “외교교섭 비밀도 못 지키면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공개 발언은 신중하고 때로는 자중해야 한다. 만약 여러 차례 불법 기밀을 유출하고 취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그건 범죄를 넘어 국가위기를 초월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고위 외교관의 정보 제공도 문제지만 만약 강 의원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이라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다면 제

식구 감싸기의 금도를 넘어선 아주 무책임한 일이 되고 한국당의 변명도 공색하기 짝이 없는 명백한 허위가 된다”며 “우리당은 국가기밀 유출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운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공당이길 포기했다. 더 이상 집권 의사가 없는 사실상 파산 선언으로 국민들이 볼 것”이라며 “기밀유출을 공인제보라고 하는 건 도둑질을 선형이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황 대표의 안보 의식도 문제 삼았다. 특히 황 대표의 GP 발언에 대해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냐”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군에게) 대놓고 항명하라는 것이냐. 아니면 노골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냐”며 “저는 군대 경험이 없지만 군대에 안 갔어도 그런 말이 어떻게 국헌을 위헌되고 안다. 이게 도대체 말이냐. 막말이냐. 지속하셨으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박광운 최고위원도 “황 대표 발언은 참으로 위험하고 분별없는 이야기”라며 “과연 총리를 지낸 분이 맞느냐. 군통수권과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게 과연 이 분이 공직을 감당할 인식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송하진 지사, 소년체전 전북선수단 응원·격려

송하진 도지사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27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송하진 지사가 농구와 체조 종목이 열리는 전주실내체육관과 전주화산체육관을 잇달아 방문해 선수들을 응원했다고 전했다.

송 지사는 어린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선의 경쟁을 펼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큰 박수를 보냈다.

또한 선수 및 지도자 등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부상없이 경기에 임해달라”며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송 지사의 응원 효과 덕분에 이날 체조 종목에서만 2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이 나왔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안마의 임은성(전북체중)과 도마의 이서리(고산초), 은메달은 평행봉 설치현(전북체중)이다.

송하진 지사는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부상없이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번 소년체전을 통해 전북 체육 위상을 드높이고 전북의 멋과 맛을 알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27일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도내 선수들의 경기장(전주실내체육관·농구, 전주화산체육관·체조)을 차례로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은 전북선수단 농구팀과 화이팅을 하고 있는 모습.

당정,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

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당정은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하 폭은 줄이지 않고 현재 3.5%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5%인 세율을 3.5%로 인하했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